

2HD 기반 지상파 MMS 본격 등장하나 지상파 MMS, 이윤추구와 역할의 간극

지상파 MMS 현실화가 빨라지고 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전격허용 방침을 기점으로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행보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는 공영방송 중심의 지상파 MMS가 윤곽을 드러내며 타 지상파 방송사의 발전모델이 상대적인 대척점에 서는 듯한 불편한 모양새와 더불어, 광고료 및 기타 채널구성 방식을 둘러싼 격론까지 예고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KBS는 기존 SD 채널 3개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지상파 MMS 방식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시대에 떨어진 SD 채널을 늘리는 방법보다 HD 채널 1개를 늘려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당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상파 MMS 구성이라는 평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MMS 2HD 구성방안을 두고 외부 전문가들은 우려의 뜻을 보이고 있다. SD 채널 3개를 통해 다양한 공적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는 지상파 MMS의 기본적인 정신이 훼손되었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상파 MMS의 광고허용 가능성 및 CPS 과금에 대한 선제적 견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8VSB 허용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와 더불어 수신료 현실화 및 한정된 광고재원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얹혀 있다.

우선 SD 채널 3개를 포기하고 HD 채널 1개를 선택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은 SD 채널을 통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상파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이후 HD 화면이 기본적인 미디어 패러다임으로 실생활에 정착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HD 화면 확립이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지상파 MMS에 따른 광고정책 및 CPS 과금문제, 그리고 지상파 MMS의 통일이다. 먼저 지상파 MMS 광고정책 문제를 보자. 많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상파 MMS의 광고허용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한다면 지상파 MMS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될 정도다. 물론 이들의 발작적인 반응이 이해는 된다. 정해진 광고료 파이가 지상파 MMS에 흘러간다면 당연히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입자 이탈과 더불어 수익구조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책적 사안을 단순히 '자본주의적 관점'으로만 재단해 편협한 시각으로만 상황을 판단했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우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익구조는 자사 상품의 가입료와 홈쇼핑 송출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료를 이유로 지상파 MMS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폐쓰기에 불과하다. 더 깊숙이 파고들자면, 수평규제의 큰 틀 아래서 지상파 MMS의 허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뿌리깊은 공포가 이러한 '몽니'의 근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상파 MMS 광고정책에 대한 문제는 자본주의적 관점이 아닌, 올바른 지상파 콘텐츠의 무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적 인 책무에서 시작된 24시간 지상파 자율방송이 당사자에게 수익은 커녕 장비소모 및 인력가동으로 꾸준한 내상을 입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현재 지상파 MMS의 광고정책 불가 입장을 유지하는 방통위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해본다.(4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주파수 쥐어짜기인가, 현명한 활용인가? 화이트 스페이스 DB작업 본격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오는 12월까지 TV 화이트 스페이스(TVWS)를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퍼 와이파이, 하이브리드 고화질 방송,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른바 '유휴대역'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말까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파수가 비어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파수 혼선과 간섭을 막기 위해 지상파 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DB가 만들어지면 10월까지 DB접속 프로토콜 구현, 무선국 허가 신청을 마칠 예정이며 늦어도 11월에는 해당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미래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MBC, 제주테크노파크, 케이블 컨소시엄, 한국전력공사(자체부담), 위월드(자체부담) 5개 컨소시엄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내년부터 정식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지원금 3억 5,000만 원과 자체 부담금 등 총 15억 원으로 TV 화이트 스페이스 시범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해당 기술을 이용한 슈퍼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 대역은 비면허 서비스다.

하지만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을 두고 '과도한 주파수 쥐어짜기'라는 비판이 상존하는 대목은 부담이다. 물론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역을 골라내는 DB 작업이 선행되긴 하지만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전파의 특성상 혼선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 이후 가파른 방송이 활용하는 주파수가 적은 상황에서 무리한 TV 화이트 스페이스 발굴은 곧 주파수 넘사행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TV 화이트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속성을 염두에 두면, 해당 비판은 더욱 가열된다. 실

제로 TV 화이트 스페이스는 지상파 방송의 혼·간섭을 방지하여 방송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그야말로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역'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를 TV 유휴대역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남아도는 주파수 자원인양 포장하여 통신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하고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 존립 목적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2012년 9월 21일 구 방통위가 전파법의 하위 법령인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을 통해 TV 화이트 스페이스 대역을 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방송 진영에서는 강력히 반대했었다. 이동형 서비스에 해당 기술이 활용될 경우 심각한 난시청 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TV 화이트 스페이스는 지상파 방송 주파수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혼선 방지 마지노선'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신 기술에 맹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붕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최근 구글의 미국 화이트 스페이스 DB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증을 받은 점을 들어 미래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도 비슷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구글은 통신사나 케이블 사업자 경제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포기한 낙후지역에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공급하는 '슈퍼 와이파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국 정부가 미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하려는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글의 꼼꼼한 로드맵에 사실상 FCC가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작년만해도 FCC가 버지니아를 비롯한 4개 주에서 슈퍼 와이파이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때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파수 혼선설'의 이유를 들어 맹렬하게 반대했지만, 이제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뀐 셈이다.(3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공동 성명서] 방송공정성특위는 주어진 임무를 명심하라.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이 오는 9월 30일 종료된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합의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출범한 특위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출범 당시에도 짧은 활동기간과 정치권의 의지부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활동기간이 마무리되는 지금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 여당의 시간끌기로 인한 힘겨루기로 인해 회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날들이 허다하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면 '공전특위', '공석특위'라는 별칭도 생겼겠는가? 우리 방송인들은 지금 참혹한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이 무참히 짓밟혀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징계와 해직의 고통은 사슬이 되어 우리를 얹어매고 있다. 한가하게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 특위는 언론자유를 위해 당초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해직된 언론인 복귀 및 명예회복 △방송사 지배구조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결론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국민들의 명을 방송공정성특위는 유의미한 결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우리 방송인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특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특단의 합의를 이끌어내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언론자유와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힘을 쏟아라. 그것이 특위가 지금 할 일이다.





사설

미래부,지상파 사찰을 준비하나

진인한 사찰의 계절

지난 7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사 대상 정보통신기반 보호제도 설명회'를 열어 3·20 사이버 테러 공격 이후 방송사의 정보보호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상파 방송 4사(KBS·MBC·SBS·EBS)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넣는 방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는 당장 역풍을 맞았다.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인문사찰을 감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설명회도 파국을 맞이했다.

다시 고개를 드는 미래부의 집착

하지만 시간이 흘러 9월, 미래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지상파 방송사를 일괄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전략에서 선회해 KBS를 우선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금씩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9월 안으로 KBS와 최종 협의를 거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강행할 뜻을 숨기지 않았다.

주요기반시설 지정이 잘못된 이유

만약 미래부가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시설 점검을 핑계로 방송장악을 위한 사찰을 감행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무참히 짓밟힐 것이 뻔하다. 방송사의 정보시스템 전반에는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나 기업의 비공개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취재계획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

문이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 해당 법 제2조(정의)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고 규정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명백한 이중규제다.

반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다 태울 것인가

지상파 방송사가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보호와 사회적 담론이 필요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사 내부 방송시설망은 완벽하게 폐쇄망으로 구축되어 있고,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지난 3월 20일 방송사 사이버 테러 때도 방송 송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단언컨대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 보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지상파 방송사 인문사찰'의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미래부가 지상파 방송사를 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수한 의도라면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IPTV, 춘추전국 열리나
KT 지상파 콘텐츠 수급 확정

최근 KT는 자사의 모바일 IPTV인 올레TV나우의 이름을 가까운 시일안에 올레TV모바일로 변경하고 내년 1월부터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상파가 보유한 양질의 콘텐츠를 모바일 IPTV를 통해 서비스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동시에 다른 IPTV 사업자도 지상파 방송사와의 콘텐츠 수급을 통해 각자의 모바일 IPTV 서비스 기능 강화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 KT의 모바일 IPTV 지상파 콘텐츠 수급 계약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는 최근 지상파와 IPTV 사이에 체결된 CPS 및 지상파 무료 홀드백 기간 연장 계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IPTV는 지상파와 케이블 사이에서 체결된 CPS 계약과 달리 잠정 합의금인 28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최근 양측은 결국 CPS 280원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해당 논쟁에 있어 수습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계약의 이면에는 모바일 IPTV의 지상파 콘텐츠 수급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IPTV 사업자의 전략적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8VSB 허용의 범위가 전체 유료방송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상파 무료 홀드백 기간이 기존 1주에서 3주로 늘어난 부분도 미묘하다. 유료방송인 IPTV의 입장에서 홀드백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이 대외적으로 콘텐츠 시장 정상화의 가치를 내걸고 홀드백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에도 지상파 방송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모바일 IPTV 활성화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정부 지원을 깔고 절름발이로?
케이블의 괴상한 디지털 전환 전략

8월 3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017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감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케이블 TV 업계는 오는 10월부터 '100%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까지 대도시 지역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2017년까지 전국 100%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차세대 디지털 서비스, HD 콘텐츠, 홍보·마케팅 등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6월 말 기준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는 모두 571만으로 전체 1,495만 가입자 중 38.2%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 방송시대를 활짝 열었지만 케이블은 아직 답보상태인 셈이다. 여기에 지역별 디지털 전환율을 보면 서울은 61.2%로 비교적 높았지만 인천, 경기, 부산을 제외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모두 30% 이하로 나타났다. 케이블 업계 입장에서선 타 미디어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주 수입원인 홈쇼핑 송출료까지 불안해지는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케이블로서는 조속한 디지털 전환에 목을 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케이블 진영은 정부가 케이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직접

적인 지원은 못해도 방송발전기금 감면이나 유예, 디지털 전환 용자 지원 강화를 통해 지원사격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 디지털 전환에는 3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자체 분석이 등장한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선 개인 사업자인 케이블 업계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리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자신들이 난시청 해소 및 방송의 확장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타당성을 갖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디지털시청100%재단 및 DTV KOREA의 디지털 직접수신환경 개선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상파 디지털 커버리지의 확장과 더불어 미래부와 지상파가 추진하는 소출력중계기 신설사업 및 700MHz 대역 주파수의 난시청 해소 방안과 지상파 MMS 등 다양한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이블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도시 중심

의 유료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지상파 콘텐츠마저 무상으로 가져가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케이블 업계에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대입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케이블 업계도 이러한 논란을 인식해서인지 작년만해도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김장일 새누리당 의원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특별법'은 여전히 번시다.

최근 케이블 업계는 정부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여 타 미디어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한편 홈쇼핑 송출료 등의 실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8VSB 허용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무단 활용을 전제로 하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양방향을 비롯한 진정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도래는 늦추는 한편, 일부 군소 PP의 퇴출로 인한 케이블의 다양성 훼손과 고화질에 매몰된 미디어 서비스를 강요해 가입자 유출을 막는 것에만 사업적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미래부, 좌충우돌 주파수 정책 논란
900MHz 무선 전화기 내년부터 사용금지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 사용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900MHz 아날로그 무선전화 사용자는 연내 1.7GHz나 2.4GHz 대역을 쓰는 디지털 무선 전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700MHz 무선 마이크 대란과 마찬가지로 이번 900MHz 무선 전화기 사용 금지 조치도 정부의 안일한 주파수 정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래부는 12일 "이동통신 전파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과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900MHz 주파수 대역을 쓰는 무선 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며 "내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는 1.7~2.4GHz 대역을 쓰는 디지털 무선 전화기와는 다르며 비면허 장비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부의 발표에 일각에

서는 '엉터리 주파수 정책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내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제도 및 홍보 시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무선 전화기는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아날로그 제품으로서 비면허 대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700MHz 무선 마이크 종료 정책과 마찬가지로 미래부의 어설픈 주파수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작년 실시된 주파수 경매에서 KT가 정책적 판단 미스로 9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무선 전화기 간섭으로 해당 대역의 LTE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미래부도 자연스레게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해당 무선 전화기 종료를 부랴부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 7월 900MHz 대역 주파수에서 자신들이 LTE-A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우리의 잘못을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 주세요'라고 읊소하는 황당한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의 주파수 대역을 800MHz 대역 주파수 쪽으로 0.7~1MHz 옮기는 주파수 클리어링을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LET주파수 경매를 거친 현재의 상황은 약간 유동적이다.

대한민국 주파수 정책은 관련 부처의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누더기로 전락한다는 오래된 속설이 있다. 당장 올해 여름에 들어닥친 전력 수급난을 둘러싸고 정책을 입안한 핵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판국에,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남발을 통해 국민의 공공재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CPS 280원으로 잠정 합의

논란이 되던 CPS 가격이 280원으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본지 확인결과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는 IPTV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350~400원 수준에서 논의되던 CPS 가격을 280원으로 확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CPS를 두고 벌여진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의 갈등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지금까지 CPS를 두고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IPTV와 케이블을 위시한 유료방송 전반은 끊임없이 갈등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의 온전한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CPS 가격책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중론이었던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여기에 최근 케이블 업체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막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부분도 이번 지상파-IPTV CPS

협상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유료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를 공격인 영역으로 끌어오려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CPS 협상 관점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CPS 협상 타결에도 암초는 있다. 먼저 CPS 협상이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지상파-유료방송의 확고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이번 지상파-IPTV CPS 협상 타결로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가격상징 협상은 완료했으나 당장 내년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특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및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CPS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확률이 높다. 특히 유료방송의 8VSB 허용 및 지상파 MMS 현실화를 계기로 CPS 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케이블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8VSB 허용 주장이 전체 유료방송으로 확대될 경우 CPS 과금 대

상에 대한 논란부터 그 적정선을 확정하는 논리가 첨예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이블의 경우 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CPS 과금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8VSB 허용 현안은 곧장 CPS 논란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도 마찬가지다. 또 지상파 MMS가 안착이 될 경우 CPS 과금 체널에 대한 논란도 예고되어 있다. 심지어 미래창조과학부의 8VSB 연구반에서는 지상파 MMS와 유료방송 8VSB 허용 논란이 함께 논의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CPS가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논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앞으로 등장할 여러 가지 방송기술 현안이 어떻게 시장에 안착하느냐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다란 변곡점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김주옥 kjo5554@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700MHz 대역 108MHz폭 중 40MHz폭은 통신용으로 쓰도록 의결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상파 방송이 쓸 수 있는 UHDTV용으로 남겨야 한다"(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9월 3일 라디오에 출연해...궁정적인 판단입니다. 단,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을...전임자도 비슷한 생각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70년 전에 위베르 보브메리는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이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질 것 같다"(손석희 앵커) ⇨9월 16일 JTBC 앵커로 복귀하며...종편이라는 그곳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낼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닐까요?

KBS 노조, 파업 가결

KBS 노동조합이 실시한 KBS 정치독립 및 임금인상 투쟁을 위한 찬반투표 결과 90%의 높은 찬성률로 총파업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투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5개 노조 중 KBS 공영노조를 제외한 KBS 노조, 언론노조 KBS본부(2노조), KBS 자원관리노조, KBS 방송전문직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다.

이에 KBS 노조는 "본부노조(2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인해 복수노조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넘어야 파업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KBS 노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역대 최다 투표 참여를 보였고, 특히 기자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율은 90.5%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백용규 KBS 노조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 투표는 임금인상 뿐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도 겹쳤다. 파업이 높은 찬성률로 가결된 데에는 정치독립이 불가능한 현재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본다"며 "일단 기자회견 등 청와대와 정권권, 국민들에게 우리가 왜 파업을 하는지 알리는 방식으로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KBS 노조의 파업을 둘러싸고 많은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수신료 현실화를 둘러싼 KBS의 전격적인 노선변경 가능성과 더불어 사측의 비상경영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KBS 노조가 전격적인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KBS 노조의 전향적인 움직임이 전체 KB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최철환	편집주간 김성훈
편집위원 김윤중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최진홍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김주옥
기획실 강동균	인쇄인 성진&화성프린원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총관 15층
전화 02-3219-5635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미래부 세종시 이전 확정아냐”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새누리당 정책위가 “이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반복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거쳐 두 부처 이전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새누리당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당정협의 결과를 반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수부의 유지를 기대하던 부산의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

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부산을 방문해 “(해수부 유치와 관련해)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공약 이행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역시 당정협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업무 영역을 보면 원칙적으로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면서 이전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발표 이후 바로 반복된 만큼 당분간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래부와 해수부 이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부와 해수부의 이전을 놓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해당부처의 공무원 노동조합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부 노조는 ‘세종시 이전보다 창조경제 실현이 우선’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으로 과천청사에 동지를 튼 지 6개월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면서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 설 국내 기업의 약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미래부의 부처 이동보다 창조경제 실현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해수부 노조는 “해수부가 국토해양부의 해양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무를 기반으로 설립됐고, 국토부·농식품부 모두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였으니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일”이라며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과천시 시민들은 미래부 이전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충청권 시민들은 “세종시 입주를 환영한다”는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미래부와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재정난 OBS에 ‘정책적 배려’ 시급 “공익적 민영방송에 맞는 콘텐츠 경쟁력 갖춰야”

지난 2007년 12월 28일 OBS가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15,000명이라는 경이적인 숫자의 발기인들과 함께 ‘공익적 민영방송’을 표방하며 힘차게 첫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OBS는 또다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고 ‘제2의 경인방송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중심으로 OBS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OBS 6년, 그 역할과 활로의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중수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OBS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책적 배려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OBS가 정상적인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B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BS의 광고 수익은 274억 원으로 미디어채널 체제 도입 전인 2011년 281억 원보다 더 줄어들었다. 중소방송사를 살리겠다고 마련한 미디어채널 체제가 오히려 보호대상인 중소방송사의 수익을 떨어뜨린 것이다.

(1면에 이어)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업체까지 TV 화이트 스페이스 쟁탈전에 나섰다.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케이블 TV 박람회인 ‘전미케이블협회(NCTA)’ 쇼에서 마이클 파월 NCTA 회장은 FCC 의장과의 대담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슈퍼 와이드밴드가 보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허가 없는 주파수 비(非)면허대역을 케이블 업체에 허용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무선의 영역을 활용하여 케이블 업체들이 자신들의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국내의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을 주도하는 진영이 통신 진영이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비슷한 흐름이다.

미래부는 결국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을 슈퍼 와이드밴드 용도로 활용할 복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

으로 보인다. 물론 방송의 혼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전제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작년 이동형 통신 서비스 기술에 대응하는 구 방통위의 태도로 볼 때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당시에도 구 방통위는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을 이동형 통신 서비스에 적용하면 혼간섭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난시청 현상이 발생한다는 우려에 대해 전국을 ‘그리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과 그에 따른 슈퍼 와이드밴드 기술 등은 케이블과 통신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IT 위상 강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일 수 있다. 그러나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노는 TV 주파수’라고 정의내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전제다. 2012년 12월 31일 전국 디지털 전환이 완

전지역연대 집행위원회는 ‘개국 뒤 6년, OBS 제 역할 다했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시청자들은 OBS를 공익적 지역민방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OBS의 프로그램 속에선 지역성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출범 초기 프로그램의 독특함, 기획 프로그램 등을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OBS 내부 구성원들 역시 이러한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회맹조합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개편을 분석한 결과 보도 외에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18.3%로 지난해 대비 29.3% 감소했고, 구대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44.5%로 지난해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 100% 자체편성을 앞세웠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박중수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OBS에 정책적 지원을 해주더라도 OBS가 스스로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정책적 배려를 해주더라도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독립민영방송사’로서 시청자들에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료되고 올해 10월까지 지역별 채널 재배치 사업이 진행되면 방송사는 활용 가능한 채널이 46개에서 38개로 축소된다. 여기에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주파수 효율성도 떨어지는 마당에,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슈퍼 와이드밴드 기술로 쓰게 된다면 심각한 난시청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송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의 강력한 동력 드라이브와 혼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절실한 때다.

현재 미래부는 슈퍼 와이드밴드 및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해당 계획의 성패는 방송 혼선 문제 해결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홍 rgdsz@kobeta.com

MBC 방송기술인, 또 한번 성장하다 방송기술연구회 제작 실무운영 교육



MBC 방송기술인협회가 주관하고 21개 관계사 지부(19개 지역 계열사, MBC C&I, MBC 플러스 미디어)에서 총 30명이 참가한 방송기술연구회 제작 실무운영 교육이 2013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여의도 방송센터 및 일산 드림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3월 NPS 및 송출기술관련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교육이며, 해당 교육에는 전체 관계사가 참여하는 집체 교육이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영상, 음향, 조명 제작, NPS 실무의 4개 분야에 대해 서울 본사의 해당 분야별 강사가 2박 3일간 실제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시 교육을 진행했다. 관계사들의 희망 분야를 지원받아 영상 10명, 음향 10명, 조명 5명, NPS 5명으로 나뉘어 강사 6명이 인출해 이론 교육, 견학, 실무 운영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예능/드라마/교양 프로그램 제작, 뉴스 제작, 영상/음향 후반 작업 제작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 전수에 방점을 찍었다. 또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강사 1명에 교육생 5명을 배정하여 소규모로 구성하였으며, 교육 일정을 교육생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해 진행한 점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이에 본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그동안 전체 관계사 대상의 집체 실무 운영 교육이 없어 협회원들의 교육 욕구가 높아진 시점에서 이루어져 협회원들의 참여 및 호응이 좋았으며, 2박 3일간 끊임없는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으로 실제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협회원간 정보 교환이 활발하여 방송기술연구회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이었다”고 자평했다. 동시에 이들은 “실제적인 제작 기법 습득은 물론, 협회원 상호간의 사소통의 장을 마련되었고, 그동안 제작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본사 협회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방송기술연구회는 협회원 상호간 방송 기술 및 제작 기법에 대한 자율적인 의견, 정보 교환 활성화, 지역 계열사간 현안 공유,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라는 모토로 2012년 MBC 방송기술인협회 산하로 설립되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방송기술교육원, 제주에서 세미나 연다 10월 1일, 방송의 미래를 생각하다

지역 방송기술인의 기술 및 정책적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차세대 방송기술과 관련된 정보교류와 지역 우수 방송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디지털 방송기술 세미나’가 “방송의 미래를 생각하다”는 주제로 10월 1일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오전 10시 20분 세미나 소개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10시 30분에는 CBS 안영기 강사의 디지털 라디오 방식별 기술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

다. 이어 12시 중식이 끝나면 오후 1시 30분부터 KBS 이완식 강사의 디지털 방송환경 정책동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 MBC 최우식 강사의 UHD-TV 관련 강의가 계속된다.

본 교육의 접수는 당일 현장등록이며 교육비는 무료지만 교육생 출장비는 각자 자체부담이다. 문의는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031-219-8261~2)로 하면 된다.

김주옥 kjo5554@kobeta.com

이승현 교수, ISU 회장 선출

이승현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대학원 교수가 1975년에 조직되어 40여 개국 1,500 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국제 스테레오 클럽인 ISU(International Stereoscopic Union)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D 사진, 3D 비디오, 홀로그래피, 가상현실을 비롯한 모든 스테레오 입체 기술 관련 분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SU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조직이자 세계 뉴미디어 플랫폼 발전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올해에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에서 3D 입체

영상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해 장비 전시회와 워크숍 등 다양한 교류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여기에 2015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20회 ISU 국제 대회의 집행위원장으로 조성우 광운학원 부장이 추대되어 눈길을 끌었다. 2015년 9월 1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ISU 국제회의는 3D한국국제영화제, 3차원방송영상학회 국제컨퍼런스, 3D장비전시회 등 관련 행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IBC, UHD-TV는 현재 진행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IBC 2013의 주요 화두는 역시 UHD-TV였다. 실제로 IBC 2013에는 UHD 방송을 위한 촬영 및 편집, 송출장비 라인업이 1차 완성 단계로 접어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은 자국의 UHD-TV 발전을 자축하듯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메라와 방송편집 기술 등을 선보였고, 미국의 블랙매직 디자인(Black Magic Design) 등도 저렴한 가격의 카메라와 함께 편집, 보정, 송출까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스크린간 협업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관련기술을 선보였다.

현재 UHD-TV는 기존의 MPEG4보다 압축률이 뛰어난 HEVC 코덱의 등장으로 날개를 단 상황이다. 하지만 HEVC 코덱은 지난 7월에야 국제 표준화가 완료된 만큼 상대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기간이 짧았다. 그런 이유로 IBC 2013에서 UHD 영상을 실시간으로 압축하는 인코더와 이

를 풀어주는 디코더 장비의 등장은 볼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세계 유수의 영상 코덱 회사도 HEVC 실시간 코덱을 지원하는 방식은 HD에 머물러 있고 UHD급 해상도를 지원하는 장비는 주문형 비디오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최근 HEVC 코덱이 아닌, MPEG4 코덱으로 UHD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이 개발되는가 하면 HEVC 코덱의 발전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런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영역의 발전 로드맵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IBC 2013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UHD-TV는 새로운 방송시장의 추상적인 미래에서 본격적인 경쟁의 각축장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을 유지하며 UHD-TV가 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8VSB, 종편-케이블의 전리품?

케이블 방송의 8VSB 허용에 대한 막판 논쟁이 뜨겁다. 다음달 정식으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클리어캠 TV와 더불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관련 정국도 요동치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반 가동을 통해 전 세계 최초 유료방송에 대한 8VSB 허용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미 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기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견은 청취한 상태며 25일에는 한국방송협회의 의견도 취합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늦어도 10월에는 케이블 방송의 8VSB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케이블 사업자의 8VSB 허용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인 중소 PP의 퇴출에 따른 케이블의 구조적

약화 가능성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8VSB 허용 문제가 1990년대 초 ‘다양성’을 모토로 출범한 케이블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에 커다란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8VSB가 허용되면 현존하는 PP의 40%가 자연스럽게 퇴출의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여기에 8VSB 허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둘러싸고도 특혜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자연스럽게 8VSB 허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클리어캠 TV와 같은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 논란도 있다. 케이블에 대한 8VSB 허용은 궁극적으로 케이블 가입자의 아날로그 상품 고착화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화질만 충족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8VSB 현안은 진정한 디지털 전환의 장에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최근 8VSB 현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전격 허용으로 결론이 난 클리어캠 TV가 KT 스카이라이프를 위시한 케이블 외 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처럼, 8VSB 허용 문제로 케이블 및 종편 특혜, 다양성의 훼손,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 등의 문제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재 케이블 외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도 8VSB 허용을 주장하라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고, 이러한 논란이 지상파 MMS 현실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심각한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CPS 논란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1면에 이어)지상파 MMS에 따른 CPS 과금 문제는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이는 주파수 대역 및 채널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치하기로 한다. 그리고 지상파 MMS을 둔 방식의 의견통일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2HD로 지상파 MMS가 정해진다는 확인은 누구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활발한 의견교류도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지상파 MMS는 수익의 도구가 아니다. 그리고 거창한 신기술이 아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해내지 못한 일종의 오래된 숙

제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지상파 MMS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공적인 미디어 서비스의 구현과 그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의 교집합에서 이뤄져야 한다. 유료방송의 8VSB 허용에 따른 지상파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의 마구잡이 활용이 당연한 상식으로 인지되는 과당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상파 MMS를 통한 공적 미디어 환경을 지킬 의무와 그에 따른 지속 가능한 자원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런 틀 아래서 보면 지상파 MMS의 채널구성 등은 차라리 작은 문제로 보일 지경이다. 또 하나, 직접수신율의 촉매제로 활용될 지상파 MMS도 간과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삼성-LG, “중국시장 잡는다”

보급형 UHDTV로 세계 최대 시장 선점 노력



삼성전자가 올해 초 선보인 초고화질(UHD) TV 85형에 이어 55형과 65형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중국 TV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세계 최대 TV 시장인 중국을 선점하기 위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오후 북경 시내 최고급 호텔인 국무호텔에서 현지 미디어와 유통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UHD TV 풀 라인업과 커브드 OLED TV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행사 직후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UHD TV 55형과 65형의 판매를 시작했으며, 커브드 OLED TV는 23일부터 북경과 상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시와 판매에 나서고 있다.

박재순 삼성전자 중국총괄 부사장은 “지난 상반기 중국 시장에서 55형 이상 프리미엄 평판 TV 매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며 “중국 소비자들에게 삼성 UHD TV의 판매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커브드 OLED TV의 본격 출시를 통해 삼성의 기술력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전자 역시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리츠칼튼 호텔에 150여 명의 VIP 고객 및 기자단을 초청해 55형과 65형 UHD TV와 55형 곡면 OLED TV를 선보임 바 있다.

중국은 이미 북미와 유럽 시장을 제치고 세계 최대 TV 시장으로 등극했다. 시장조사업체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평판 TV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7.8%로 지난해 24.3%보다 3.5% 포인트 늘었다. UHD TV를 포함한 프리미엄 TV 시장을 두고 뽀

을 때에도 북미와 유럽 시장은 성장이 정체된 반면 중국 시장의 성장률은 매우 가파르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 소비자를 입맛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꿈의 화질’로 불리는 UHD TV는 보통 Full HD TV(1920×1080) 해상도의 4배(3840×2160)인 4K와 8배인 8K(7680×4320)로 분류된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4배, 8배 등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화질을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사람 얼굴의 주름 하나는 물론이고 작고 미세한 동작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또렷하게 보여줘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보는 영화보다 뛰어난 화질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때문에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세계 TV 시장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TV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급 제품인 UHD TV의 판매는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2011년 200대 규모였던 세계 UHD TV 시장이 오는 2016년에는 724만8,200대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UHD TV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프리미엄 TV 시장에 이어 보급형 TV 시장에서까지 당분간 UHD TV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UHD TV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UHD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와의 ‘원-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UHD TV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시장에 비해 콘텐츠 사업이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만큼 지상파 방송사와 손잡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KBS와 LG전자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처럼 지상파 방송사와 제조사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플랫폼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사 기반시설 지정 현실화?

KBS 우선 지정 후 순차 진행…반발 격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명백한 언론사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지정이 결국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래부는 당초 지상파 4사를 일괄적으로 기반보호시설로 지정하려던 것에서 선회해 KBS만 우선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7월 24일 관련 설명회를 열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기반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했던 미래부가 다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3·20 사이버 테러 공격 이후, 방송사의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지상파 방송 4사(KBS·MBC·SBS·EBS)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사 송출시스템을 특별 관리하는 것은 ‘언론사찰’이라는 반발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일련의 작업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실무 총괄을 맡는다고 알려져 반발은 더 커졌으며, 결

국 해당 논란은 표면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다시 행동에 나서며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사이버 테러 등의 공격으로부터 지상파 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해 기반보호시설 지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지정 권고 여부와 지정 대상은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래부는 당장 25일 KBS와 최종 의결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발은 엄청나다. 미래부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점검을 목적으로 무차별한 사찰을 감행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무참히 짓밟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사의 정보 시스템 전반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나 기업의 비공개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취재계획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

상파 방송사의 기반보호시설 지정은 사실상 정부의 언론사찰이라는 반론이 거세다. 오히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기반보호시설 지정은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KBS도 내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KBS 2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미래부는 언론사찰 의도가 없다느니 외부 기관에 대해해 문제가 없다느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방송사의 송출, 보도 등 주요 시스템은 이미 자체 보안이 갖춰져 있어 국가기관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부가 지상파의 기반보호시설 지정 정국을 주도하며 KBS 우선지정 카드를 매만지는 가운데, 칼자루를 쥔 방통위는 일단 관망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최종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미래부의 강력한 정책 모멘텀과 지상파 방송사의 반발 추이를 살피며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겠다는 의도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와이브로 출구전략, 미묘한 온도차이 감지

미래부는 점진적, KT는 전면적



미래창조과학부가 와이브로 시장을 LTE-TDD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실상 시장가설로 여겨지는 와이브로를 포기

하고 새로운 통신기술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그러나 미래부의 와이브로 출구전략은 전면적 LTE-TDD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국내 와이브로 1인자 KT의 로드맵과는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미래부는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와이브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와이브로 기술을 포기하고 LTE-TDD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출정식과 비슷했다. 전 세계적으로 와이브로 기술이 모멘텀을 잃어가는 현상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실제로 와이브로 시장은 매우 저조하다. 시장 조사업체인 오범(Ovum)이 지난해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전 세계 LTE 점유율은 94.6%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와이브로의 경우 5.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인텔·삼성전자 등 와이브로 장비 생산 주요업체들이 모여 만든 와이맥스포럼은 사실상 와이브로의 기술 진화를 포기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기술적 발전은 가로막힌 상황이다. 국내상황도 요원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주파수 재할당

이후 와이브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상용서비스 7년차인 현재 가입자수는 103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입자수도 지난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3G나 LTE의 무선인터넷 트래픽 분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도 지난해 1월 9%에서 올 7월 5.1%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KT의 경우 공개적으로 와이브로 사업의 포기를 주장하는 정책제안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물론 당시에는 방통위가 직접 나서 와이브로 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천명했다. 이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하지만 미래부와 KT의 와이브로 사업 포기 및 LTE-TDD로의 전환에는 미묘한 온도차이가 감지된다. 미래부는 아직 사업자에게 할당하지 않은 2.5GHz 대역 주파수를 와이브로뿐 아니라 TDD-LTE용도로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해당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KT는 해당 주파수 용도를 전격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 즉, 미래부는 기존 가입자 보호를 위해 점진적인 사업 전환을 꾀하는 반면 KT는 전면적인 사업 전환을 주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토론회에서는 100만의 와이브로 가입자를 보유해 전체 가입자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KT가 와이브로 용도로 할당받아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2.3GHz 주파수 대역도 TDD-LTE 용도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석수 KT 사무는 “KT는 와이브로 부분에서 세계 4위 사업자로 조 단위를 투자해 국가 산업인

와이브로에 공헌했고, 1조 원이 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기존 사업자보다 신규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와이브로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해 정부차원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현행 제도상 주파수 용도 변경을 임의로 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사실상 KT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전파법상 사업자를 가지고 용도를 전할할 수는 없고, 할당도 경매로 해야 한다”며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의 용도를 바꿔줄 수는 없다”며 일정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100만이 넘어가는 와이브로 가입자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여기에는 와이브로 2위 사업자인 SKT와 시민사회단체도 동의했다.

와이브로는 3세대 이동통신기술의 성공에 고무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가 주축이 되어 통신사들까지 가담해 만들어낸 국내 토종기술이다. 한때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 수출되며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의 미래로 각광받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와이브로는 LTE 기술에 밀려 내리막을 걷는 중이다. 지금까지 와이브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통신사들의 민감한 정책 추진 선회 가능성까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향후 주파수 수급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에 주파수 경매를 마친 LTE 주파수에 이어 와이브로 주파수까지 LTE에 활용되게 된다면, 방송용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의 난시청 및 뉴미디어 발전 활용 여부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관련 심층분석 기사가 5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단신뉴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방송영상경연대회(Broadcast Worldwide, 이하 BCWW2013)’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4,180만 달러(현장진계)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KOCCA가 주관한 이번 BCWW2013은 전 세계 50여 개국, 170개 전시사가 참여했고 1,700명에 달하는 바이어와 약 5,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특히 이번 BCWW에서는 국내에서 방송 중이거나 아직 방영이 되지 않은 드라마들이 대거 판매돼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구닥터>, <왕가네 식구들> 등이 아시아 각국에 판매됐고, 이밖에도 현재 방송 중인 MBC <스캔들> <투윅스>를 비롯해 SBS <황금의 제국> <주군의 태양> 등도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여린 주목을 받았다. 홍성표 KOCCA 원장은 “올해는 투자유치설명회, 바이어 투어 등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가 업체들의 수출 성과가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BCWW를 국내 우수한 다양한 장르의 방송 콘텐츠가 해외에 더 많이 소개되고 투자가 이뤄지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내용이 영터리인 ‘2012 회계연도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후 이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간단한 예결산 수치조차 잘못된 것도 모자라 후속조치에도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방통위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결산설명자료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방통위에 요구해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의 결산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두 자료의 결산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결산설명자료의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2012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2억 7,200만 원, 집행액 1억 6,900만 원, 불용액 1억 300만 원인데 반해, 방통위가 별도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액은 3억 2,700만 원, 집행액은 2억 1,600만 원, 불용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사업의 세부 내역 중 ‘인사교육훈련 우수기관 현장 학습’ 사업의 경우 실제로 방통위가 실시하지도 않은 사업인데도 국회 결산설명자료에는 1,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가 오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2월 작성된 해당 자료를 5월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기에 이상일 의원이 자료의 오류수정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후속작업을 거치지 않은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8개월이 지난 후에도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뒤늦게 오류를 인지해도 수정작업에 나서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 해 동안 국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심사받기 위해 제출하는 결산설명자료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한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잘못을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방통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EBS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EBS국제다큐영화제를 고려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BS와 고려대는 지난 16일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올해 진행되는 EIDF 주요 행사를 공동 주최기로 했다.

EBS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고려대와 건국대, 인디스페이스 등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대학 내 LG-포스코 경영관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영화제 기간 고려대 캠퍼스에 있는 영화관 KU시네마트랩에서 출품작

들을 상영하고, EIDF 다큐멘터리 아카데미인 독 캠퍼스(Doc Campus)를 미디어학과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EIDF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EIDF 독 캠퍼스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전문가들을 위해 마련된 4일 코스의 다큐멘터리 실무 워크숍으로 다큐멘터리의 기획에서부터 사운드 디자인, 트래일러 제작 등 제작과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의 노하우에 이르기까지 실무적인 부분들을 교육한다. 영상제작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 코스와 기성 감독을 대상으로 한 전문 코스로 나누어 진행되며,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김경아 EIDF 사무국장은 “영화제와 대학의 제휴는 캐나다의 ‘토론토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과 토론토 대학교, 미국의 ‘풀 프레임(Full Frame) 다큐페스티벌’과 듀크 대학교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이번 EBS와 고려대의 업무협약은 영화제를 중심으로 방송사와 대학이 연결점을 만들어 행사의 이카테미즘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방송통신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추위)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교추위 위원 중 전문성을 고려해 방송 분과와 통신 분과로 나눠 구성했다. 분과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 시 방송의 역할 및 인터넷 화상 상봉 확대방안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성규 교추위 위원장은 “이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SBS의 SNS 활용을 소개합니다

한 창 진 SBS 편성전략본부 소셜미디어팀

SBS는 작년 10월

‘리스닝 센터’를 신설하여

리스닝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방송 콘텐츠의 역량 강화를

피하고 있다.

SBS 리스닝 센터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됨에 따라 시청자들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SNS상에서 마음껏 표출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시청자들 간의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다시 방송 콘텐츠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과 소셜미디어의 공존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프로모션이나 모니터링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리스닝(잘 듣는다)의 개념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SBS는 작년 10월 ‘리스닝 센터’를 신설하여 리스닝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방송 콘텐츠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리스닝 센터는 기존의 PR팀과 심의팀, 그리고 신설된 소셜미디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언론 홍보와 심의 모니터링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내부 소셜 리스닝 역량 강화

“잘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다”는 말처럼 SBS는 리스닝 센터를 중심으로 시청자들과 보다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소셜 리스닝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9월 국내 방송사 중에는 최초로 소셜미디어 리스닝 시스템을 사내에 오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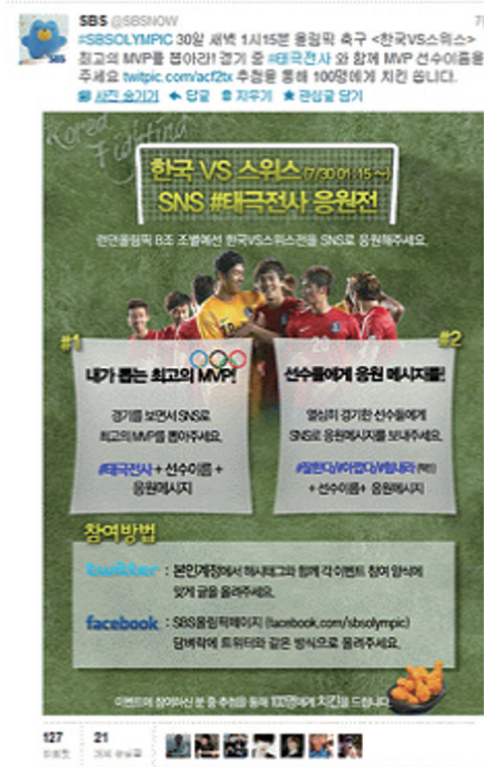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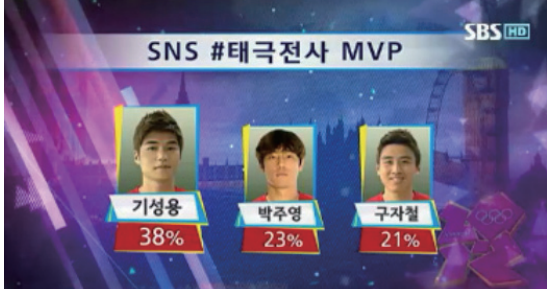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 나타나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제작 관련자들이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손쉽게 빠르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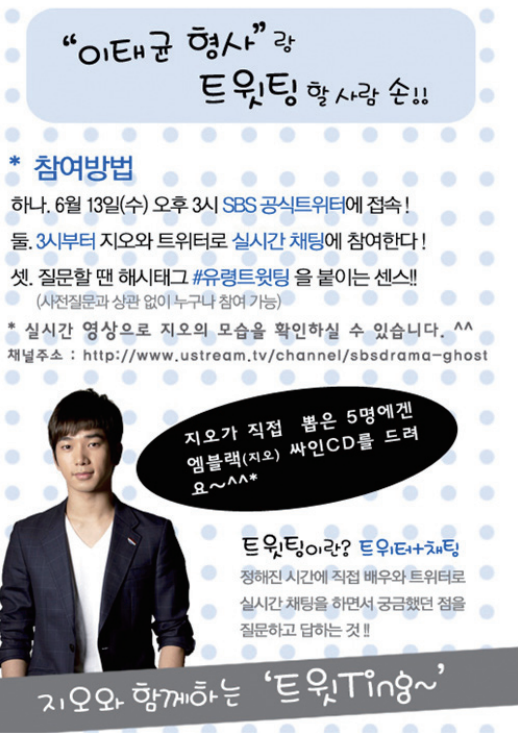
리스닝 기반의 실질적인 소셜 커뮤니케이션

현재, SBS 미디어 그룹 내에는 약 24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리스닝 센터 소셜미디어팀에서는 ‘SBSNOW’라는 대표 계정을 운영하면서 개별 계정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일방향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 상 방송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자칫 일방적으로 콘텐츠 홍보 내용만 전달하는 스팸성 계정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에 리스닝 개념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팀의 계정 운영 전략은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라는 소셜미디어 본래의 속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청자들 간의 실질적인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셜미디어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배포를 통해서 시청자들 간의 소통을 유도하고 있다. 방송 예고, 티저 영상, 현장 스케치, 셀프 인터뷰 등 소셜미디어에 적합한 클립 형태의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



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배포함으로써 시청자들 간의 공유를 유도한다. 특히,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작 발표회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방송 전후로 콘텐츠의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연말 〈SBS가요대전〉에서 시도된 ‘레드카펫 영상’은 스타들의 레드 카펫 입장과 셀프 카메라, 그리고 대기실 현장 스케치 등이 담긴 3분 미만의 클



립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또한, ‘소셜리픽’이라 불린 지난 런던 올림픽을 거치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시도했다. 특히, 태극전사 응원 이벤트의 경우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SBS콘텐츠허브에서 개발한 소셜TV앱인 SOTY를 활용하여 오늘의 태극전사 MVP 투표를 실시하고, 중계 방송과 연계함으로써 시청자 유입을 유도했다.

빅이벤트를 통해서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출연진과 함께하는 분방 사수 이벤트, 정해진 시간에 직접 배우와 트위터로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답하는 트윗팅 이벤트 등 방송 콘텐츠와 연계된 다양한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기획,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와이브로’ 출구전략 시동 미래부-KT-SKT, 미묘한 입장차?

정부가 퇴출 위기에 놓였던

‘와이브로’의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와이브로 정책방향(안)’에

따르면, 현재 2.3GHz 대역에서

제공 중인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미할당된 2.5GHz 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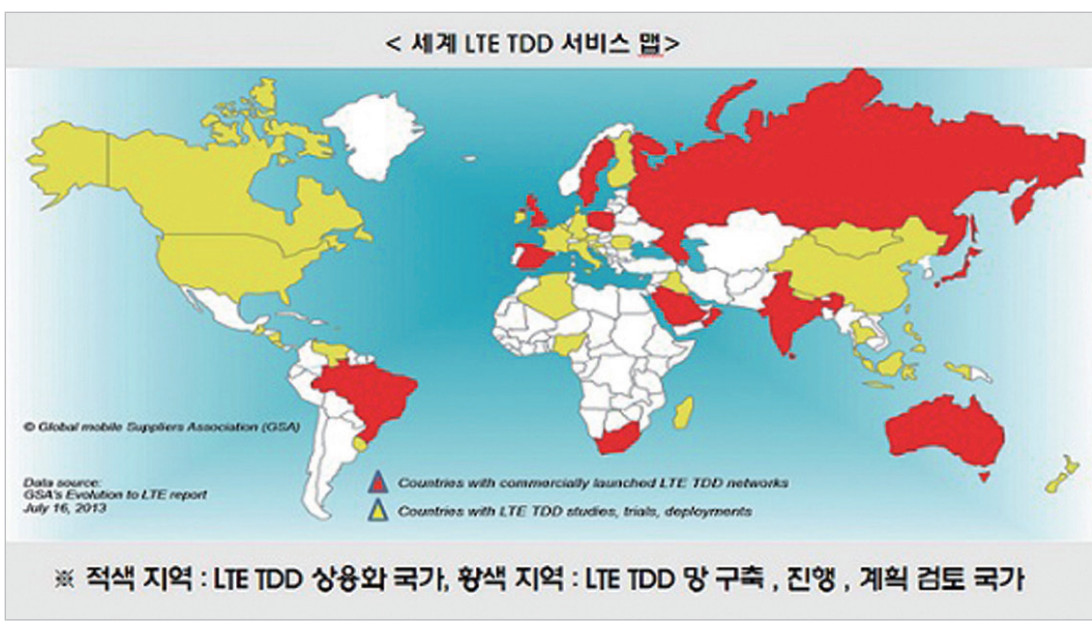
40MHz 폭 주파수에 대해선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TDD(롱텀에볼루션

시분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와이브로는 2000년대 초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가 주축이 돼 개발한 토종 기술로, 이동 중에도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무선인터넷 기술이다. 와이브로가 처음 나왔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LTE 기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부도 순수 국내 기술이라는 기대 속에서 국책사업으로 와이브로를 지원했지만 뒤늦게 기술개발이 이뤄진 LTE 기술이 와이브로에 비해 투자금액 대비 효율이 높다고 밝혀지면서 너도나도 LTE 기술로 갈아타게 된 것이다. 결국 4세대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놓고 통신 사업자들이 LTE를 선택함에 따라 와이브로는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게 됐다.

반면 LTE-TDD 기술은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단체인 3GPP가 표준화한 시분할 방식 국제 표준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구현된 국제 표준화 기술이다. LTE가 주파수 분할 방식인 것과 달리 시간 분할 방식으

로 사용하고 있어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동시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7월 현재 전 세계 59개 사업자가 LTE-TDD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도입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KT와 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와이브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진 만큼 와이브로 기술은 이제 사양길에 들어섰다’면서 “세계 최대 와이브로 사업자들도 이미 LTE로 전환한 만큼 우리나라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와이브로 정책 방향(안) 마련에 나섰고, 전담반의 최종 결과물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미래부의 와이브로 정책방향(안)에 따르면, 우선 2.3GHz 주파수 대역에서 현재 제공 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된다.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 시 용도와 기술방식을 특정해 공고, 엄격한 이용을 위해 변경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LTE-TDD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7월 현재 103만 명 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주파수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파수 회수 및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 전환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번 정책방향(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 할당된 2.5GHz 대역 40MHz 폭이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TDD 기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말 발표예정인 ‘모바일 공개도플랜 2.0’에 반영할 예정이다. 2.5GHz 대역과 함께 미할당된 2.3GHz 대역 30MHz 폭에 대해서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회수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와이브로가 현재 국방 분야 등 특수목적 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가 선정될 경우 기술구현 및 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외에도 TDD 핵심기술 연구 지원, 차세대 TDD 장비 및 단말 개발, 응용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TDD 통신 산업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한 뒤 중견·중소기업이 포함된 국내 TDD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 통신과 제조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미래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들어 와이브로를 LTE-TDD 쪽으로 바꿨으면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삼성전자 쪽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미래부 주최로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와이브로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이석수 KT 경쟁정책담당 상무는 “그동안 약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 와이브로 사업을 유지해왔는데 할당받은 주파수 내에서의 LTE-TDD로의 전환은 막고, 신규 사업자들만 LTE-TDD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 자체가 (공정성에 어긋난) 일종의 특혜”라며 기존 사업자들도 LTE-TDD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전파법에 따르면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의 용도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KT 측의 용도 변경 요청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KT가 약 100만 명의 와이브로 가입자 가운데 90%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KT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와이브로 2위 사업자인 SKT와 시민사회단체도 미래부와 뜻을 같이 했다. SKT 측은 “와이브로가 트래픽 분산, 예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요금도 저렴해 인기가 있다”면서 와이브로 사업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도 고려해야 하고, 와이브로가 트래픽 분산용으로 활용되면 통신요금 인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와이브로 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사업자간 입장차이 등으로 정책 도입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의 위기와 특혜논란

지금 대한민국 방송 환경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명백한 특혜. 이에 본지에서는 종편 바꾸기 논란부터 클리어팜 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정 사업자의 특혜현황을 긴급진단한다.



재승인 심사까지 ... '종편 바꾸기' 결정판 연구반이 제시한 최종안보다 후퇴해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이 제시한 최종안보다 완화된 기준이어서 '종편 바꾸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초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가 그 대상으로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심사기준안에서 각 항목별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각의 사업자는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①1000점 만점에 650점 미만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②개별 심사항목 40% 미만시 조건부 재허가의 기준이 적용된다.

동시에 그동안 종편과 보도채널에 제기된 공적책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항목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심사항목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을 배점을 강화해 각 항목의 평가점수가 50% 미만일 경우에도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 '종편 바꾸기'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난다. 애초 연구반은 심사항목 2번과 3번을 핵심 심사항목으로 선정하면서 "각 항목의 배점이 60% 미만일 경우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연구반이 제시한 최종안이 방통위 회의를 거치면서 50%로 완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의견 수렴 자리로 마련된 '종편 및 보도 PP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과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심사항목 4.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5.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절성'의 배점이 상당히 축소됐다"면서 "건전한 재무구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방송사들은 약탈적 광고 영업 등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 자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보고 배점을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종편은 지상파와 달리 그동안 정부가 의무재전송, 황금채널, 광고직접판매 등의 혜택을 준만큼 정치적 혜택을 고려해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핵심 심사 항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종편이 승인조건 이행 등의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퇴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의견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학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전문가들은 "방통위는 중박 감점 및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주주들에게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자는 연구반의 제안도 무시했다"면서 "연구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요량이면 애초에 연구반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연대는 같은 날 '종편 재승인 총대 메고 나선 이경재 위원장, 제2의 최시중이 될 셈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연구반이 제출한 기준안에서 크게 후퇴해 종편에게 유리한 재승인 심사안이 최종 의결됐다"면서 방통위가 종편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 멋대로 좌지우지할 거라면 연구반은 왜 운영한 것이고 토론회는 왜 개최했냐고 캐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세금낭비다"라면서 "최시중 씨가 그랬던 것처럼 그 선택이 가져올 후과는 반드시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클리어팜 TV, 무엇이 문제인가 (1)

10월 클리어팜 TV 상용화를 앞두고 막판논쟁이 뜨겁다.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가 공개적으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박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협박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클리어팜 TV 채널구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어 이목을 끈다.

9월 11일 미래부는 각 방송 사업자들을 불러 클리어팜 TV의 이용요금 및 운용방안과 더불어 채널구성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업체는 클리어팜 TV 채널 구성 방안을 제안하며 1번 아날로그 의무형 상품, 2번 방송법상 의무운용채널 포함 40개 이하, 3번 방송법상 의무 운용채널-지상파 방송-홈쇼핑 채널 포함 29개 이하, 4번 방송법상 의무운용채널만 포함해 19개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장 케이블 업체가 제시한 4가지 방안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 및 기타 미래지향적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 문제 등을 차지한다고 해도, 채널 숫자가 상대적으로 초안보다 늘어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상파 채널에 대한 케이블 SO의 무단 배정 등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홈쇼핑 송출을 포함한 3번째다. 당초 클리어팜 TV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에 방점을 찍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다. 여기에 홈쇼핑 채널은 상업적 방송으로 당초 클리어팜 도입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목적과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케이블 업체의 8VSB 허용 및 기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요구와 이번 클리어팜 TV 3안이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존재로 인한 홈쇼핑 수수료 사수정책이 고스란히 클리어팜 TV 정책에도 묻어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케이블 업체의 3안은 클리어팜 TV가 저소득층을 위한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가 아닌, 110만에 달하는 홈쇼핑 송출료를 지키기 위한 밥그릇 지키기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게다가 홈쇼핑 채널은 의무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송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클리어팜 TV에 반대하는 부분은 감안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에는 채널 약관 승인을 마치고 예정대로 10월에 정식 도입을 한다는 계획을 재차 천명했다. 클리어팜 TV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클리어팜 TV, 무엇이 문제인가 (2)

최근 케이블 업체가 4개에 이르는 클리어팜 TV 제안을 제출한 가운데 홈쇼핑 채널을 포함한 3번째 제안이 논란이다. 여기에 채널 숫자에 대한 논란도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 및 케이블 지지 정책의 비판속에서 19개 채널 마지노선에 대한 토론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월평균 소득이 90만 원인 156만 세대 경우 셋톱박스 없이도 관련 기능이 내장된 TV만 사면 월 3,500~4,000원의 비용을 내고 지상파는 물론 소수의 디지털 케이블 TV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클리어팜 TV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만만치 않다. 홈쇼핑 송출료를 둘러싼 복마전과 더불어 케이블 업체의 사업적 부당성 및 온전하지 못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비판까지 맞물리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미래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시청자 복지의 측면에서 클리어팜 TV 강행을 여러차례 천명했다. 10월 클리어팜 TV 출시는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제공되는 채널 숫자다. 이에 지상파 및 케이블을 제외한 유료방송 진영은 클리어팜 TV에 홈쇼핑 채널 배제는 물론 방송법상 의무운용을 포함한 19개 채널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 지상파 디지털 전환으로 보편적 미디어 복지가 강화된 마당에, 굳이 클리어팜 TV 채널을 과다 배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CJ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 MSO들은 채널 숫자가 40개는 되어야 다양한 시청자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는 검은 속내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이 저소득층을 언급하며 다양한 케이블 시청자 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클리어팜 TV에 채널 숫자가 줄어 들면 케이블 MSO들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케이블 8VSB 허용을 주장하며 군소 케이블 PP 퇴출을 통한 케이블 다양성 훼손에는 별말이 없다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클리어팜 TV에서 갑자기 '다양성'을 주장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콘텐츠 시장 저가화 및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 그리고 홈쇼핑 송출료와 채널 숫자까지, 클리어팜 TV를 둘러싼 논쟁의 현실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지상파 플랫폼, 양심불량인가?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두고 방송과 통신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 연구반 발족에 뜻을 모았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논란을 예고하는 가운데 일부 언론의 도를 넘은 주파수 정책 왜곡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로 통신사와 유료방송의 막강한 자금력에 영향을 받는 언론이 전문지의 가면을 쓰고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할당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관련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부 언론은 700MHz 대역 활용을 정치적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재단하는 기사를 실었다. 2004년 디지털 전송방식을 결정하던 당시 미국식과 유럽식의 차용을 두고 방송기술 업계에서 벌어진 엄청난 분란사태가 700MHz 대역 주파수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해당언론은 당시 디지털 전송방식 선정 논란은 결국 정부가 바라던 대로 흘러갔으며, 결국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었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언론은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을 둘러싼 현재 방송과 통신의 논쟁도 큰 틀 안에서 보면 소모적인 다름일 수 밖에 없으며, 700MHz 대역 주파수는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2004년 디지털 전송방식 선정당시 미국식이 아니라 유럽식으로 정해졌다면 현재의 불필요한 주파수 논쟁이 없었을 것이라는 절대적 명제를 외면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시장을 공략하려

는 가전사들의 입김에 휘둘려 디지털 전송방식을 미국식으로 정하는 패착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제는 생략하고 단순히 당시 상황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재단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만약 당시 디지털 전송방식이 주파수 효율이 높고 SFN이 가능한 유럽식 방식으로 정해졌다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경쟁도 상당부분 완화되었을 것이다. 또 700MHz 대역 주파수 통신할당을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 즉 해당 주파수의 전세계적 통신활용을 기정사실한 부분도 '팩트'와는 거리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 선진국인 유럽이다. ATSC의 고향인 미국이 대부분의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해버려 막상 차세대 뉴미디어 플랫폼인 UHDTV에 활용할 자원이 막막해진 상황에서 유럽은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할당한다는 스탠스를 유지하며 통신에는 1.2와 1.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제로 영국 BBC의 경우 '오프콤'의 강력한 지원 아래 HD 채널을 적극적으로 늘리며 통신용 주파수도 방송용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또 WRC-12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활용하고자 요구했던 일부 아프리카와 중동의 의견을 유럽이 반대한 사례도 있다. 비록 이런 팩트조차 통신진영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세계적 통신용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곡해되어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ABU 서울 선언문 채택도 통신진영에서 꼼꼼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일부 언론의 팩트 곡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방송이 주파수를 무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28MHz 폭이 아니라 408MHz 폭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의 이면에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받는 통신사와 상대적으로 '무료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송사를 대비시키는 전략이 숨어 있다. 통신의 주파수 활용이 53조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을 불러일으킨다는 과장한 전망도 꼭 나온다.

이는 명백한 곡해다. 이에 대해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방송이 활용하는 대역은 채널 14번~51번까지 228MHz폭, FM 라디오 20MHz폭, AM 라디오 1080KHz폭, 지상파 DMB 12MHz폭으로 약 261MHz폭이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중계용 주파수(STL, 마이크로 웨이브 포함)를 포함해도 408MHz 폭은 과도하게 계산된 것이다"고 단언했다. 디지털 방송에 활용되는 228MHz 폭을 포함해 모든 영역을 계산한 부분도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408MHz 폭은 부풀려진 계산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대선후보시절 공약한 화이트 스페이스가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생기는 주파수 간섭, 또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의 무선 마이크 활용에 따른 주파수 빼먹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심지어 228MHz 폭만 놓고보면 방송 주파수 혼신 문제로 심각하다. 이는 작년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구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삼은 바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쏙 빼고 방송은 408MHz 폭이나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은 그 자체로 논란이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는 디지털 방송의 영역으로 300MHz 폭 수준을 할당하는 분위기다.

방송이 주파수를 공짜로 쓰고 있다는 비판도 문제가 많다.

이는 두 가지로 반박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송과 개인기업인 통신사가 가지는 공적 역할이 같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방송은 통신보다 조금 더 공적인 요소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신의 공적 기능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방송이 가지는 공익성과 비교하면 통신의 공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초라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파 방송사는 중계용, 업무 통신용 등을 통신사와 차이없이 납부하고 있다. 거기에 방송발전기금도 납부한다. 여기에는 이런 명제가 성립된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며 그 재산을 활용하는 방송사는 무료 보편의 가치로 국민에게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두고 방송과 통신의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사로를 겨냥한 불편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고 방송과 통신은 각자의 논리를 수렴하며 선제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전제해야 할 부분은, 우선 방송은 무료 보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전송방식의 폐해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점. 228MHz라는 수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방송사는 주파수를 공짜로 쓰기 보다는 국민에게 차용하여 활용하며 실제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통신 주파수의 세계적 활용은 700MHz 대역 주파수가 아니라는 점도 화룡점점이다. 이 부분은 통신사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한 긍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주파수를 매각하면 돈은 생기지만, 그 주파수를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인문학적 가치를 온각 방식으로 곡해해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미래부 세종시 이전, 무엇이 문제일까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두고 말들이 많다. 당정 협의회에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자 모든 논란이 한꺼번에 불거지는가 싶더니 2시간만에 돌연 발표내용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동시에 미래부 노동조합은 9월 13일 부처 이동보다 창조경제 실현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출범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라 창조경제 실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한 우려와 절망을 느낀다고 밝히며 어려운 정부살림에 이사비용은 둘째치고라도, 다른 부처보다 늦게 출범한 미래부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데 세종시 이전 여부가 갈팡질팡하는 행태가 거듭되고 있어 업무 지속성 및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당초 비 이전 대상기관인 방통위, 국과위, 행안부 등에 소속됐던 현 미래부 직원 60% 이상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번 세종시 이전 발표로 직원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과천시 주민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9월 16일 별양동 그레이스호텔 앞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통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철회하라는 대대적인 기습시위를 벌였다. 동시에 정부 과천청사이전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 김영태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밀실아합으로 진행되는 정부청사 이전 계획에 통분하는 마음과 참담한 심정으로 모였다”며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모아 정부의 과천 홀대 정책을 타파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물론 정치인도 가세했다. 송호창 국

회의원(과천·의왕)은 “미래부 이전을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내부적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지역상권은 죽든 말든 쓰레기처럼 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정당과 여야를 떠나 과천의 생존권을 지켜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 이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단순한 정부부처의 이동은 아니라는 것에 모든 이들이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래부의 탄생과 그에 따른 과천 방랑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관한 고시를 보면,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국세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고시에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 이에 정부

도 지난 2010년 8월 20일 관련 고시를 통해 2005년 10월 5일에 확정된 계획대로 일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대통령의 승인과 최종안도 확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정치도 가세했다.

세종시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치조직과 주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정부 조직 개편 당시 폐지됐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시 통합한 중앙행정부처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안전행정부가 세종시이전위원회에 보고한 이전부처 대상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를 제외하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법과 계획대로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법무·여성·안행부 등 6개 관련 부처는 서울에 남기고 모든 부처는 세종시에 설치토록 법에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지적들은 난감한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당장 본지의 온라인판 기사를 인용해보자. ‘미래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과천청사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과천청사 입주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부 조직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틈을 노려 정부조직 서열 6순위인 법무부가 당초 미래부가 입주하기로 했던 과천청사 1동을

차지해버렸다. 동시에 법무부는 약 300미터의 이사를 위해 무려 1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쓰고 현판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기획재정부에 밀려 과천청사 1동을 쓰지 못했던 법무부가 정부조직 서열이 높은 미래부를 무시하고 한풀이를 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덕분에 미래부는 오히려 겨자먹기로 과천청사 4동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미래부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3년 말 과천청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이 공간에 방위사업청 등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동시에 2,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근무하는데다가 별도의 보안시설까지 마련해야 하는 방위산업청은 산업부가 빠지는 3동과 바로 옆 미래부가 쓰고 있는 4동을 함께 쓸 것을 요구했다. 미래부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셈이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1동으로 간 법무부의 원래 보금자리이던 5동으로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원래 1동으로 가야했던 미래부가 4동으로 갔고, 다시 5동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미래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안정이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계적인 안정인지, 아니면 과천 청사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 범위적 내치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두 가지 사안을 그대로 접목시켜 단순하게 비계량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지양하고, 오로지 미래부와 그 구성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구성이 최우선 사업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지역민영방송, 공적책무를 강화해야

국회 지방살리기포럼·지역방송협의회 공동주최로 <지역민영방송 정책토론회>가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깊은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역 미디어의 중심인 민영방송에 대해 상대적인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었던 만큼, 본 토론회는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지역 미디어의 발전과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방통위 홍성규 상임위원이 “지역방송은 지역공동체의 유지·발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서 “그런데 방송권역이 무너져 CJ·종편 등의 프로그램 경쟁력이 증가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한 부분은 폐부를 깊숙이 찌른 훌륭한 지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민영방송의 존재가 방송 환경의 궁극적인 발달을 유인한다는 오랜 지적이 방통위 상임위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적절하다는 평이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역방송은 급속한 성장과 과

감한 투자가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공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역시 지역민방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한 훌륭한 상황판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영화된 민영방송에 공적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전히 논란이다. 이는 지역민방의 태생과 관련된 궁극적인 가립막으로서, 완전히 공적인 요소를 담당하기 어려운 일종의 합정과도 같은 일이다. 이에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업화와 사영화된 매체에 무조건적인 공적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지역민영방송 쪽에서도 지원에 상응하는 공적책임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적인 역할을 담보해 나가는 한편, 그에 걸맞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부분을 짚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답은 없을까.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의 발언에 해답의 실마리가 있다. 최 교수는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영방송사 내부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및 편성규약의 명시화와 프로그램 제작에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적절한 견제가 돌파구라는 뜻이다. 또 그는 “세계의 화두는 이제 세계화가 아니라 지역의 세계화”라면서 “지역민영방송은 그 속에서 지역주민의 지역성과 문화성을 고양해야 하는 헌법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교수는 “그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제작이 일정 비율 이상 제작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비율에 따라 방송사의 재허가와 관련된 방송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가 언급한 부분에서 지역민방의 재원 안정화가 현실화되면 상황은 더 나아질까. 단언컨대, 지역 미디어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할 것이다. 재원 안정화를 통한 지역민방의 공적 책무 강화와 더불어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구비는 이중,

성 기 섭 지역미디어발전연대 공동대표

삼중의 보호막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막을 통해 지역민방은 더욱 경쟁력을 가지며, 중국에는 더 훌륭한 풀뿌리 방송으로 거듭날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구비된다고 해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제도개선 및 재원 안정화로 지역민방의 활약을 위한 모든 준비상황이 끝났다고 해도, 수익의 배분 구조를 통한 대대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다. 김한기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청주방송 노조위원장)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지역민방은 성숙된 시장이 못 된다”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SBS의 배분구조이다. 1~2% 차이가 지역민방 매출에는 큰 차이를 나타기 때문에 경영진 측에서도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 부분이다.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적인 결단만 내려진다면, 지역민방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순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전시회 무료
-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KOBASHOW 2014



24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4.05.20-23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이앤엑스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